

#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7월 11일(통권46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방미 이후 문재인 행정부, 통상외교 정책 어디로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한림대학교 교수

2,000원으로 내 취향저격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다수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했다. 다행히 미국 측 논리와 준비부족 덕분에 사드배치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면 총론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우려를 깊게 하는 것은 미국 대선과정에서 보듯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화, 민주 진영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 실익에 대한 강한 의문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 FTA 재협상이든 개정 협상이든 원산지 검증,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연비기준 등 이행관련 현안은 미국 측 요구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NAFTA 재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제에 한미FTA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물론 한미구조협약까지 신설하여 양자 간 무역불균형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전개하자.

둘째,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은 자동차 등 자국 비교열위 제품의 상대국 시장점유율을 강요하고 글로벌 FTA망을 활용

한 기업의 수익모델 창출 행위까지 WTO 무역구제조치와 국내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다. 고도의 중간재 분업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3개국 밸류 체인이 단절될 위기적 상황이다. 수출제조업이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한 만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의한 소비자 맞춤형의 스마트 산업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등 4대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조기입법이 시급하다.

셋째, 환율조작(의심)국 지정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방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환율정책에서 탈피하여 통화 가치 상승이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져 국제협조적 내수주도 성장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가야 한다. 저환율을 선호하면서 정부주도로 인위적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니 가격기구의 이중 왜곡을 낳기 십상이다. 지금 바뀌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TPP재가입을 상정하고 남은 11개국과 발효를 서두르며 2013년 개시한 일·EU EPA 교섭도 지난달 마무리하고 조기 미일 FTA도 시야에 넣는 등 세계표준을 주도할 채비다. 동시다발 FTA 전략으로 확보해 온 우리 경제영토가 삼시간에 잠식당할 상황이다. 게다가 한중일 3국은 여전히 구미시장 의존적 체질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당경쟁·과잉공급으로 대미 통상마찰을 자초하고 있다.

북중러의 북핵폐기 동참, 동북아에 의한 세계적 무역불균형과 무역마찰 완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위해 한국의 TPP(11) 가입, 한일 FTA 재교섭, 한중일 FTA 조기 타결을 병행하고 동북아의 과잉저축은 이제 미국이 아닌 아시아로 환류되어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공동체 신뢰자본 형성에 요긴하게 쓰였으면 한다. 정작 문재인 행정부의 담대한 '아시아 구상'이 아쉽다.

방미 직전 경제와 안보이슈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소지를 생각하면 자국우선주위에다 기업가적 개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순방은 일반국민들의 일말의 불안감을 덜어 준 셈이다. 다행히 미국 측의 논리와 준비부족 덕분에 사드배치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시간별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니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드배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국내의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무역불균형문제는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 누군들 이의를 달겠는가.

### 대일의존도 하락, 대중의존도 상승 추세 하의 리스크 증폭

통상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가 잉태한 한미일 동맹은 냉전체제 와해와 동시에 더이상 한국이 올인해야 할 국가목표는 아니게 되었다. 즉 한국으로서는 중국 부상, 소련와해와 함께 중·소와의 접근, 특히 세계 공장, 시장으로서의 대중국 의존을 높임으로써 미일편

중에서 올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일방적 대일의존을 시정할 호기를 맞이했다. 동시에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환율변동 및 경제외적 요인 변화가 기존 2국 간 교역패턴에 이전보다 훨씬 큰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대일 수출의존도는 1991년 17.2%에서 2013년 6.2%로, 수입의존도는 1991년 25.9%에서 2013년 11.6%로 급락했다. 특히 2013년에는 수출(-10.6%), 수입(-6.8%) 모두 감소했다. 둘째, 2013년 방한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21.9% 감소(중국관광객은 52.5% 증가하는 등 일본을 제치고 최대)한 반면 방일관광객수는 상반기 전체 관광객 증가율(22.8%)보다 높았으나(38.4%) 하반기 4.3% 증가에 그쳤으며, 2014년 들어서도 후자는 7월부터 회복되었으나 전자는 매월 두 자리 수로 감소했다. 셋째, 일본의 대한투자는 2013년 전년 대비 무려 40.8%나 격감했다. 이들 무역, 투자 및 인적 교류에 미친 요인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려우나 ① 「엔약세·원강세」에 따른 가격효과, ② 한일 내수부진 등 소득효과, ③ 양국관계 악화로 인한

염한, 반일 등 부정적 국민정서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 격감은 전년도에 반작용이지만 다양한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10~2012년까지는 기존의 6重苦에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단절과 후쿠시마 원전피해에 따른 전력비 상승과 전력부족 가중으로 일본의 입지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대한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입지관련 경쟁력은 이후 2년 새 급변했다. 위안부 등의 문제를 둘러싼 혐한·반일 감정에 더해 엔화약세, 원화강세, 원전재가동, TPP 교섭 참가 등에 따른 입지경쟁력 회복, 한국의 노동규제와 대기업 및 계열기업의 중국 등 진출로 인한 일본의 거래수요 위축 등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가 축소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이자 시장인 동시에 핵과 미사일 등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일 FTA 교섭 중단, 한중일 FTA와 RCEP 교섭에 필요한 이니셔티브 부재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11월 한중 FTA 교섭 타결은 한중 양국을 급속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경제가 중국경제 감속에 따른 소위 차이나쇼크에 노출되고 한일의 잠재기술력 활용을 통한 국제공헌기회를 놓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최근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한보복에 따른 한국 올 한해 손실은 현대경제연구원(2017.6.3)에 따르면 GDP의 0.5%에 상당한 8조5천억 원 규모(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관광 7조1천억, 수출 1조4천억, 문화콘텐츠 87억 원 등)에 이르며 올 해 수교 25주년 맞는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자국우선주의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우방국에는 내정간섭까지 일삼는 또 다른 패권을 저지르는 중국의 소탐대실 행위가 그 원인이지만 사드배치

결정에 이르는 중간과정도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에 걸맞게 상대방에 설명했어야 옳았다. 동시에 한미일 동맹도 이완되기 시작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 대통령 첫 방미가 안긴 버거운 숙제

신임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은 미국이었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 원만한 관계 설정은 물론 한·미·일에 의한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 압력을 위해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행하는 선택지를 권유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듯하다. 어쨌든 한미무역불균형,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통상 3대 이슈와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증액, 사드배치와 대북제재 문제 등 3개 안보이슈가 한미정상회담 직전 예상되었던 쟁점들이었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은 두루뭉실한 총론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든 갈등을 잠재우느라 숙제만 많이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No'라는 설전도 불사하겠다는 대선 당시 당찬 기개를 볼 수 없어 아쉬웠다는 비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작은 이제부터다. 각론이 기다린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확산 등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시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 신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과 자유(Free), 글로벌(Global), 공정(Fair)이 우리의 행동목표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의 식견과 조언 없이 돌출행동을 일삼는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하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선수를 뺏긴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의미에서 문재인 행정부의 행운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이 사드배치와 북핵 대응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소지를 줄이고 한국주도의 대북대화도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대미수입과 투자확대의 선물보따리로 '대화를 통한 주도적 북핵 대응'이라는 카드를 쉽게 손에 쥌 수 있다고 믿었다면 큰 오산이었

다. 경제통상문제는 경제논리로, 안보문제는 안보논리로,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신뢰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대외경제통상 이슈의 경우 능력, 줄속, 땀질식 대응은 금물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씨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독일 G20 회의가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동북아 정부 간 협의채널 재가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미 FTA 재협상 · 개정 작업 준비와 스마트 산업 전략 서둘러야

우리의 우려를 깊게 하는 것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예견한대로 공화, 민주 두 진영모두가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TPP 탈퇴, NAFTA 협정 재협상, 한미 FTA 비판 등으로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를 내건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에 비해 보호주의 강화 정도가 높았을 뿐이었다. 클린턴 후보도 TPP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등을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에 비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은 이미 낮아져 있는 만큼 관세율 추가인하에 따른 교역이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 등 TPP 협상의제는 다국적기업 이익에만 기여할 뿐 일반국민 특히 정치권 관심대상인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다자협상과 그 결과에 대한 미국의 오랜 불만과 불신이기도 하다.

한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당의 가치와 전통과는 상반된 자국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기존 대외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대한수입규제, 한미 FTA 재교섭, 미군 주둔비 부담증액 요구에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한미일 동맹을 핵심동맹으로 인식하고 북한체제의 존재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

과 함께 북핵 · 미사일 개발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장악력 약화가 이러한 반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

첫째, 한미 FTA 재협상 혹은 개정 협상 문제이다. 원산지 검증,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연비기준 등 이행관련 현안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한국이 TPP 참여를 위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였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유기농산물 인증은 미국 업계가 원하는 만큼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원산지검증과 자동차 관련 신규 비관세장벽(안전검사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 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자 간 무역수지 흑자불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상대방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① 특정품목의 적자는 여타품목의 흑자로, 상품수지 적자는 서비스 수지 흑자로, 특정국가에 대한 적자는 다른 국가에 대한 흑자로 각각 균형을 취할 성질의 것이며, ② 무역수지는 연도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서 누적치의 경제적 의미는 없으며, ③ 무역수지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교역대상국의 비교우위와 저축과 투자 간의 결과인 만큼 적자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저축증대와 투자축소가 필수적임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한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확실히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 39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2016년 232억 4600만 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5년 258억 달러로 최고치에 이른 후 최근까지 감소세로 돌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1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371억 달러로 이중 중국 비중이 50%에 육박하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6년 1~10월 사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47.3), 일본(9.3), 독일(8.8), 멕시코(8.7), 한국(3.9), 캐나다(1.2) 순이며 일본 비중은 감소하고 멕시코, 독일, 한국 비중은 증가해 왔다.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 상위 20대 품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및 기억장치, 타이어, 철강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중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무역의 대표사례로 들고 있는 자동차(HS 87류)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무역적자 1,521억 달러 중 한국은 203억 달러(13.3%), 자동차와 동부품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무역적자 1,119억 달러 중 일본(31.5%) 비중이 가장 높고, 멕시코, 독일, 한국(14.3%)과 함께 82.6%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제품(HS 72, 73)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무역적자 285억 달러 중 중국비중은 37.2%로 가장 높고 한국은 13.4%로 제2위이다.

이 결과 미국은 다국적기업의 자동차, 특히 멕시코 산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생산기지의 국내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철강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현재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374건 중 절반이상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 대상국임(2017년 1월 현재 미국의 대한수입규제 건수 24건 중 철강이 20건)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 결과 승용차의 경우 2015년 대미흑자(159.9억 달러)가 한국 전체 대미흑자 283억 달러의 56.5%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품목에 적자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금년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금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흑자는 약 40% 줄면서 대미자동차 수출액도 8.5% 감소했고 2016년 수입된 미국자동차는 6만 99대로 2015년 대비 22.4%나 늘었다. 한미 FTA 발효전에 비해 2016년 대미자동차 수출액(154억 9천만 달러)은 79.5% 늘었지만 수입액(16억 8천만 달러)은 380%나 늘었고 시장점유율도 19%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철강제품 역시 상반기 대미수출액은 30.3%나 감소했다. 동시에 중국산 슬래브 등 철강소재를 수입가공한 강관이나 도금판 등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 비중은 우리 정부에 의하면 2%에 불과하다지만 미국은 기존의 WTO 무역구제조치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

조의 안보조항을 근거로 수입 규제하겠다고 한다. 우회수출비중 관련 통계기준이 애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FTA 망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자체를 막으면서까지 자국업종과 한계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년센스다.

이제 미국은 대미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에 더해 아예 대량무기 구입, 대미수출자율규제 및 내수확대를 통한 미국산제품의 국내시장 쉐어보장 등 철지난 결과 중시형 부문별 무역정책(Result Oriented Sectoral Approach)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 이에 한국은 기존의 한미 FTA 이행문제 조기 해결과 국내규제개혁, 미국의 대한 수출증가 업종의 시장쉐어 변화 추적, 미국의 대한서비스무역 흑자 시현 등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중간재의 과잉공급과 구미수출 의존적 산업구조 및 미국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불균형과 저축투자 불균형과의 관계 등 양국의 거시경제와 미시적 산업통상 관련 정책대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USTR이 연내 요구해 올 한미 FTA 재협상 혹은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동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협상 혹은 개정협상 시 우리의 대미요구사항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일과 함께 실질적인 범부처 및 민관협력이 긴요하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1지역·1업종·1기술에 정통한 교섭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훈련 강화는 물론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외부전문가 활용의 폐쇄성 등을 과감하게 척결하기 바란다.

둘째, 자국이 주도했던 TPP 탈퇴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매우 공격적이고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우리 수출주력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한 만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융복합에 의한 스마트 산업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조기입법이 절실하다. 글로벌 기업이

수입규제 장벽을 넘으려면 소비자 맞춤형의 고가브랜드 전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권익을 중시하는 미 의회의 지지를 당장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조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산업의 수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전,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업종의 수출품목 대부분이 범용성이 강하며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미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지 오래이며 기술측면에서도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기술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작년 초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력제조업종별로 해당제품이 성숙기라고 답한 업체비중은 컴퓨터(80%) 섬유(75%) 평판디스플레이(72.2%) 무선통신기기(71.4%) 등에서 컸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 중 각각 50%와 41.7%도 성숙기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첨단기술을 선점해도 이를 대기업의 낡은 조직과 근로행태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도 역부족이다. 최근 공공부문주도의 일자리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민간기업으로 비화되어 모처럼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 온 기존기업의 개혁의지마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동시에 한국의 對中 중급 중간재 수출과 일본의 對韓 고급중간재 수출도 감소하는 연쇄반응이 불가피하다. 한중일 은 이미 중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Global Value Added Chain: GVC)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GVC는 한국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다발 FTA 전략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상기하고 동시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타이홍수사태에서 보듯이 공

급망 단절에서 오는 피해의 막중함과 공공재로서의 동체제의 중요성을 고려한 국제적 위기관리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환율조작(의심)국 지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 및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한일)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경제제재 등 보복행위로 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 판단된다. 물론 양자 수뇌회담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대국 대통령은 동 제재가 미국경제에 부정적이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환율정책에서 탈피하여 통화가치 상승이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져 국제협조적인 내수주도 성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합당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가야 한다. 정부주도의 인위적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그동안 왜곡된 가격기구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그 복원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 TPP(11) 가입, 한일 FTA 교섭재개, 한중일 FTA 조기타결

미국은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선 당시 다분히 선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정치과정에서는 기득권의 타파가 목표였던 만큼 외교 국방 경우에도 내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외강경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초기 기득권 타파를 명분으로 적극공세로 나설 수도 있다.

이미 성장지향적 거시정책(①법인세 35%→15% 인하, ②1조달러 인프라 투자, ③에너지 산업 중심 규제 철폐, ④파리협정 탈퇴 등)과 보호주의적 무역정책(① TPP 탈퇴, ②NAFTA 재협상, ③한미 FTA 재협상, ④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⑤반이민정책 등)을 공약대로 이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

한 수출주도보다는 거품을 의식한 국내개발 주도 방식이 주류이다.

그 만큼 스테그플레이션이나 나쁜 인플레이 하의 거품경제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Morgan Stanley, Bloomberg). 그 결과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와 고금리·고달러·완만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이것도 또 다른 무역규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국외로 반출된 달러를 FRB가 예고한 대로 고금리를 통해 국내 환류시킴으로써 高달러를 유지하고 동시에 성장률을 높이려면 고달러에 반응하여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이를 통해 가계실질소득이 증가해야 국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내수주도 성장궤도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규제철폐는 매우 바람직하다. 일과성의 인위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인프라 투자는 재정적자만 누적시키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으로 창조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연구개발투자에 우선함으로써 민간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가계는 저축률을 제고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책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의한 미달러 약세유도 역시 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없이는 인플레이만 가속화시킬 뿐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 달러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의 요체이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지향 정책과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게 될 경우 대안은 한중일이 주도하는 역내무역·투자·서비스 자유화에 의한 역내경제 활성화이다. 이미 아태역내에서는 메가 FTA 기조 하에 비록 미국이 탈퇴했지만 TPP(12)(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가 타결되었고, RCEP(1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한중일 FTA는 협상 중이며 FTAAP(21)(아태자유무역지대)다자협상이 추진 중이

다.

미국이 주도한 TPP에서 미국은 탈퇴했지만 가맹국 중 제2의 강대국 일본은 가까운 시기에 미국의 TPP 복귀를 내다보고 글로벌 규범 주도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기 광역지역협정과 이를 통한 세계경제 지속성장 가능성은 전적으로 한중일 3개국의 전략적 연대에 의한 핵심적 역할 수행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RCEP(16)는 ASEAN과 중국이 주도하지만 한·ASEAN, 중·ASEAN, 일·ASEAN FTA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의 존재로 일거 타결에 이르는 어렵다. 지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당사국만에 한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이 각각의 FTA에 명기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FTA 별로 교역상품은 동일함에도 원산지규정이 상이할 경우 특혜대상이 되기 위해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 방식을 그때마다 변경해야 한다면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FTA 활용도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중일 FTA와 한일 FTA 동시병행 타결이 절실하다.

첫째, 한중일 FTA 협상은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후 2016년 6월 10차 협상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교섭진도는 지지 부진하다. 3국은 대세계 GDP 비중(21%), 교역비중(18.5%) 및 동아시아 역내교역비중(36.4%)에다 글로벌 벨류 체인의 중핵경제권으로서 가맹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동시에 이해대립과 비경제적 갈등에 따른 신뢰기반투자가 빈약하다. 3국간 양허방식, 양허분야, 협상진행 절차 등 주요현안만 논의되어 오다 최근 한일은 농산물 분야, 중국은 공산품분야의 관세인하 폭에서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은 예상대로 서비스, 투자, 지재권분야 개방에 소극적이다. 당초 한중은 한중 FTA 타결을 일본측 입장선회를 위한 지렛대로 기대했으나 일본의 TPP 교섭참가와 중일간 영토분쟁 등 극심한 불신과 이해대립으로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보완 등으로 갈등을 조기에 수습한

다면 교섭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EP(2012)에 의한 축차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계측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에 의해 한국은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sup> 즉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2~0.44%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7~1.45% 증가하고 경제적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6.11~163.47억 달러 증가한다.

둘째, 한일 FTA는 2003년 12월 1차 교섭 이후 04년 11월 6차 교섭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일 양국은 ① 아시아금융위기 시 APEC 기능부전과 실물과 금융의 동시불황 위기 재발 방지, ② 선진제국의 전략적 FTA 증대에 따른 역외국으로서의 양국기업의 무역투자전환 피해 최소화, ③ 업종간 경쟁력 격차 축소와 중복투자에 따른 마찰 회피, ④ 중국 부상에 공동대응, ⑤ 국내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외압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나머지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주의에 동참하게 된다. 양국 모두 개방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칠레와 싱가포르를 각각 선택하고 이들과의 교섭경험을 토대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선진국형 FTA를 체결하고자 했다. 동시에 양국은 정상간 합의, 한일 2002 월드컵 공동개최, 한류 붐과 함께 양국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교섭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인프라도 정비했었다.

그러나 양국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부처마저도 「총론찬성 각론반대」로 일관하면서 관세양허안 조차 제출하기를 꺼려했다. 특히 한국측은 단기적으로 무역불균형 확대와 부품소재산업의 피해를 우려했었다. 양국간 관세율 격차, 일본의 자국 부품·제품 선호 경향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NTB)을 고려할 때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곤란한 반면 일본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전기전자 부품, 고급기계류, 핵심소재, 고급승용차 등의 수입 급증과 연구개발 혹은 상품화 직전 단계의 국내업체

의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측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일본측은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 정치외교적 갈등의 여파로 교섭은 개시 1년 만에 중단되었다.

셋째, 한국의 일본 주도 TPP(11) 가입과 한일 FTA 교섭 재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이미 지적인 대로 TPP(12)에서 미국이 탈퇴한 상태이지만 일본은 미국의 TPP 재가입을 상정하고 이를 복원함으로써 세계적 통상규범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3년 개시한 일·EU EPA 교섭도 지난달 마무리하고 동시에 TPP(11)의 발효와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한EU FTA를 통한 우리의 유럽시장 선점이익도 불확실해지고 국내외에서 중일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과 삼성전자 1개사의 영업이익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동시다발 FTA 전략으로 확보해 온 경제영토가 삼시간에 잠식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우선 TPP(11)에 가입함으로써 한일양자교섭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실질적 양허를 받아내기 힘든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TPP(11) 교섭을 통해, 그리고 한일고유의 공산품, 경제협력, 비관세장벽 분야는 한일 FTA 재교섭에서 이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TPP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EU와 함께 세계표준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역이용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FTA의 실질적인 교섭 재개를 위해 교섭당시 합의한 높은 수준의 교섭원칙을<sup>2)</sup> 재확인하고 재교섭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는 한중일 FTA 교섭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역내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메가 FTA 목표는 역내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분업구조 개혁이어야 한다. 2000년대 들면서 한일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를 대상으로 중국 등과 분업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중국의존으로 대체된다. 그 결과 2010년경부터 일

본의 대한·중 무역흑자는 변함없지만 한국의 대일적자는 대중흑자에 의해 상쇄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한중일간 중간재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경제권이 EU와 같은 제품간(각자 완성품)분업권과는 달리 역내 3각무역과 공정간(중간재 상호공급)분업권으로서 일본-한국-중국·ASEAN간의 공정간 및 사업간 수평분업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90년대는 일본(자본집약형 부품소재)-아시아 4마리 용 NIEs(노동집약형 가공조립)-최종재의 구미일 수출이라고 하는 소위 3각 무역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기술집약형 고기능부품소재)-한국, 대만 등 NIEs(자본집약형 부품소재)-중국·ASEAN(노동집약형 범용부품소재)-최종재의 구·미·일·한 등 NIEs수출이라고 하는 3각무역과 중간재 상호공급체제로 동아시아 Supply Chain이 고도화된 것이다.

그 결과 중국진출 日系, 韓國系, 臺灣系 기업도 한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을 통해 중국 내수와 대세계 최종재 수출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중흑자에서 부품·소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중간 부품소재 교역규모 확대('92년 21억 달러에서 '08년 967억 달러)와 함께 한국 부품·소재의 대중무역흑자도 급증했다('92년 2천만 달러에서 '08년 135억 달러). 이와 같이 한국은 대일 부품소재 수입의존으로 인한 무역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한국진출 日系기업과 함께 중국진출을 통해 고기능부품·소재의 대일, 대중, 대ASEAN 공급과 대세계 최종재 수출제품 제조능력을 확충해 왔다.

2000년을 경계로 부품·소재의 대일수입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 대중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기계와 전자기계 부품 및 화합물·화학제품과 제1차금속제품 등 고기능 소재의 대일의존도가 높아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내 생산유통 네트워크는 일본, NIES기업의 동아시아진출 확대, 현지기업의 생산기

술수준 향상, EPA/FTA 등에 의한 관세장벽 저하 등에 의해 복수의 역내국가와 지역에 걸친 중간재의 역내 상호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다국간 고도의 공정분업에 기여하고 있다. 역내무역 투자자유화를 위한 한국의 FTA 전략의 유효성 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Wang, Wei, Zhu(2013)에 의한 수출총액기준의 RCA와 GVC의 생산단계에 기여한 부가가치 기준의 NRCA(New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을 보면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은 5개 산업군(전기전자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화학제품, 석유 및 정유, 금속 및 금속제품)에서 총액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 모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sup>3)</sup>

최종재를 가맹국이 상호교역하는 EU와 비교할 경우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분명히 훨씬 효율적이지만 구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진출 일계, 한국계, 대만계 기업이 현지 최종제품을 미국과 EU만이 아니고 대일·한·대만수출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중국은 한·일·대만의 대미·EU 우회수출기지로써 구미제국의 수입규제 압력을 자초하고 세계적불균형(Global Imbalance)과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생태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대표가 지적한 중국산 철강제품의 한국우회 수출 역시 비록 글로벌 기업이 FTA 망을 활용한 수익창출 활동임에도 미국의 강력한 수입규제에 묶인 중국의 철강과 잉생산과 대미철강수출의 한계에서 비롯된 미중마찰의 전형인 셈이다. 우리는 이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으로 물 건너 불 보듯 소극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중일 3국내 제조업종의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구미제국과의 마찰이 다양한 업종에서 빈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중일 3국의 신성장동력을 조기가시화,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한일은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분업구조 고도화를 향한 공정별(수직적), 사업별(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한일 FTA와 한중일 FTA를 조기 타결함으로써 기술+시장+지역의 통합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역내통합의 기초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제국은 환율절하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환율조작(의심)국 지정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일국의 거시경제변화는 단순한 자국통화의 달러 환율보다 여타국 환율과의 명목실효환율 변동에 더 민감하며 수출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통화절하에 의한 무역수지개선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구조개혁 지연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정권의 지속적인 QQME(양적질적 금융완화)와 같은 암묵적 엔화약세 유도 개입은 금물이다. 오히려 점진적 통화절상을 수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입물가와 소비자 물가하락을 통해 물가안정, 유효수요 진작,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내수 특히 서비스업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실로 공공투자에 버금가는 경기 진작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시장메커니즘에 의거한 내수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자금이동과 환율하락은 금물이다. 통화가치 인상분을 수출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시장쉐어가 급속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쉐어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마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물가와 금리 안정, 적절한 해외진출과 현지시장 친화적인 기술과 제품 차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한중일 3국이 금융시장불안에 선제적, 호혜적, 효율적(Preemptive, Mutually beneficial, Sufficient)으로 대응하도록 통화스왑의 실적과 경험을 활용하고 치앙마이 다자화협정(CMIM)를 통해 역내금융자본시장 안정과 육성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동아시아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

다. 동아시아 역내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과잉저축이 구미의 국제금융센터를 경유하여 국내로 환류함으로써 통화와 期間의 부조화(Mismatch)가 발생, 아시아금융위기를 자초했던 경험에 비추어 역내저축은 역내에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시주석, 아베총리의 트럼프용 선물보따리는 정작 아시아역내에 먼저 풀어야 한다. 이제는 여유자금의 저수지 물꼬를 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제, 국제금융기관채권 시장 육성, 증권화와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통화리스크 경감(달러·엔·위안화 등 역내통화 바스켓트 표시 채권 발행 등), 아시아 신용등급기관 육성 및 일본의 AIIB 가입과 자금 확충도 필요하다.

일곱째, 한중일은 3국간은 물론 아시아 역내국을 향해 실질적 시장개방, 직접투자, 기술이전의 三位一體型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양자간 FTA 든 지역협정이든 공동연구 당시에는 중국이 산업경쟁력 취약성으로 인해 수송기계를 포함한 제조업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일방적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한중일 3국간 기술격차 축소로 중국 측의 일방적 피해는 상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WTO 가입 후 외국인투자 확대, 국제경영자원과 노하우 유입, 생산성 향상, 무역·투자 자유화, 비관세장벽 완화·철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력강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영토, 역사, 군사 문제 등 비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한중일 FT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사드배치 반대 등 내정간섭보다 한중일 FTA 교섭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한중일은 아래와 같은 동북아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구조조정과 개혁 및 건전한 거시정책 운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① 동아시아광역협력을 위한 메뉴의 공동개발이다. 3개국 Green Growth 분야(성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성장) 특화업종 선정, 공동기획 및 연구개발과 고도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환경, 교육,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한류·관광)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추진.

② 한중일 주력업종의 과잉생산·과당경쟁체질 시정, 아시아 진출구미기업에 공동 대응하여 차세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류와 부품의 모듈 계획 수립, 부품 공용화·표준화, 계측기기 등 세계시장에서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3개국 투자협정과 MRA(상호인증협정)을 조기 타결, 일본의 정밀화학 분야 대한투자와 기술이전, 한국의 범용제품분야 플랜트 운영기술의 중국 이전, 중국 서부대개발을 위한 단일플랜트 공동 진출, IT, NT, BT를 활용한 공정개선, 원료전환기술 등 차세대기술과 환경분야 공동기술개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등 전자정보·방송통신 분야 공동개발 및 세계 표준화 경쟁 공동참가, 고도 컴퓨터부품 표준화·공용화·상호인증, 3개국 대학 및 고등연구기관 간 AI, IoT, 빅데이터 등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한중일 One-Campus 사업 확충, Port & Hub Sale 과당경쟁 시정과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정보망 공동 구축 및 Eco-city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추진.

③ 한중일 3국은 상기 분야별 공동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상시 구조개혁과 금융 외환 재정 등 거시정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TPP에서 약속한 농업분야 개방을 한중 양국에도 허용하고 10% 이상 고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철폐·완화, 외국 전문인력의 원활한 유출입을 저해해온 각종 인허가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한국은 차세대 전략부품·소재 국산화,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중국의 경우 2008년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거시정책 구사와 세계적 불균형시정을 위한 환율변동폭 확대조치 등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경험을 살려가야 한다. 금후에도 경제운영의 투명성제고, WTO 가맹국으로서의 국제적룰 준수, 국영기업의 상시적 개혁과 사회보장 확충, 국내지역 간 소득격차 축소, 중국현지 진출기업 관련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잠

재력 활용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시아를 향한 담대한 구상에 기대

이상과 같이 한중일 3국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중심 보호주의적 정책운영에서 오는 디플레이션을 상쇄하고 동아시아 역내 상호수요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북핵 폐기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철지난 결과 중시형 무역정책이 기승을 부릴 공산이 높지만 그 주요원인인 동아시아의 구미의존적 산업무역구조는 단기간 내 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EU의 재정위기와 Brexit 경험을 타산지적으로 가맹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자율, 경쟁 그리고 연대를 기본으로 한중일 3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한일은 한국의 TPP(11) 가입, 한일 FTA 재교섭에 나서며 중국은 아시아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한중일 FTA 교섭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자, 서비스, 지재권 분야에서 과감한 실질적 개방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함께 맞이하는 저출산·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무엇보다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출된 재정적자와 장기국가채무,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장래불안 요인을 제거하며 기업의 발전단계별(起業-창업-성장-성숙)로 적절한 혁신지원 시책을 강구하는 일에 정부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가격기구를 왜곡시키는 전인미답의 정부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민간기업 창의에 의한 투자주도 성장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튼튼경제-건전재정-지속가능사회복지의 3개 경제사회운영목표가 조화됨으로써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상시구조조정과 규제철폐, 불요불급한 세출삭감과 세원 확충, 동아시아 고유의 自助·公助·共助(자기부담, 조세, 보험료의 조합)의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및

인본사상에 기초한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 확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동아시아 정치 군사 안보 외교적 갈등이 더 이상 민간 경제활동과 문화 인력 교류협력을 통한 공공외교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도록 최고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3국의 기성세대도 스스로가 쌓아온 역사를 과소평가하고 자신마저 부정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미래세대가 무모한 갈등과 경쟁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한중일은 모름지기 세계와 동아시아 역내 공동번영을 제약하고 있는 Global Imbalance를 시정하고 Asian Paradox를 제거하여 과잉저축은 이제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로 향하게 하여 핵폐기 후의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위한 신뢰자본 축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는 북핵폐기 후의 아시아를 향한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기 바란다.

★ 본고는 김도형, 「동아시아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의 통상협력 정책방향」 한국국제통상학회-타이완 경제학회-KIEP 공동 학술대회, "Trade Policy of New Administration in Korea,"(Panel II), 타이페이(2017. 6. 23)를 추가 보완한 것임.

1) Dynamic GTAP Database V.8(10형식에 따라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에 의거하여 129개 국가/지역, 57개 산업, 11개 국가/지역, 19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자료 이용.

2) 양국이 합의한 5개 원칙은 ① 包括的(농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자유화 추진), ② 總合的(고도의 투자를 정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분야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강화, 정부조달, 과학기술, 운송, 인력이동, 중소기업 등 광범한 분야 협력 추진), ③ 實質的(모든 분야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 주요수출품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단축), ④ 互惠的(양국의 지속적 성장, 공동번영, 협력강화), ⑤ WTO+α (WTO 규범과의 조화 및 지역통합 모델케이스 제공)으로서 중장기의 긍정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3) 김수동 외, 『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과 제조업 부문 경제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6-798, 49~52 쪽, FTA 효과가 비교우위 지수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 지수의 분해가 필요함.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